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 첫발...이재명, 공동위원장에 문정인 위촉



22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정인 경기도 국제 평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출범하는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 사장을 위촉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오늘(22일) 오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문정인 이사장에게 '경기도 국제평화 교류위원회' 초대 공동위원장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문 이사장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향후 2년간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문 공동위원장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낸 자타공인 통일·외교·안보 분야 최고 권위 전문가로, 현재 세종연구소 이사장,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Global Asia> 편집인으로 활동합니다.

도는 문 이사장이 중앙정부와 학계, 민간 등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만큼, 경기도가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 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는 지난 1월 8일 제정·시행된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수립·시행하는 일체의 국제교류 정책에 관해 자문을 하게 됩니다.

도는 향후 초대 국제평화교류위원회 위원으로 강호제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교수,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박노벽 전 주러시아 대사관 대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30여 명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구대서 kds@ifm.kr

경기도, 25일 '지방정부 공적개발원조' 국제평화토론회

경기도가 국내외 각계 전문가들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방정부의 평화 공적개발원조(ODA)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경기도는 오는 25일 국제개발협력 학회와 함께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에서 '아·태지역 지방정부

평화 ODA와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2회 국제평화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 지방정부 ODA를 아·태지역에서부터 '평화 ODA'라는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곽재성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성규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이 '지방정부 평화 ODA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한 후 토론자들과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자로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 국장, 전성환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정희시 경기도의원, 버나디아 텐트 라데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UCLG ASAPC)사무총장, 조대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무총장, 박지연 전북대 교수가 나선다.

참석자들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평화 ODA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시민단체, 학계의 입장을 공유해 향후 협력체계 강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을 벌이게 된다.

노주희 경기국제평화센터장은 "이번 토론회는 ODA에 대한 아·태지역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도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적극 수렴해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 ODA를 선도하는 지방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먼지만 쌓이는 희망’ 이제는 정치가 답해야

특권 기사  개성공단 폐쇄 5년
멈춰버린 평화시계

>2< 골< 분단의 땅에서 평화의 땅으로

文대통령 대표공약 ‘공단 재개’
‘서해안 경협벨트’ 국정과제로
현정부 시간 1년밖에 남지 않아
임기내 ‘가시적 결과물’ 기대도
이재명 “재개선언 최우선 과제”

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 임기 내 답보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해법을 찾고 개성공단 재개를 향한 전전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단 재개는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다. 지난 2016년 2월 공단 폐쇄 직후 문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오히려 위기를 키우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며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질타한 데 이어, 이로부터 1년 뒤 대선 후보 시절에는 “정권 교체될 이르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천만평까지 확장하겠다”며 공단 3단계 프로세스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앞선 보수 정권과 달리 빗장을 쉽게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국제 제재의 그늘 아래 공단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아슬아슬 5년만 흘렀다. 이제 현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시간도 1년이 전부다. 이 때문에 올해가 공단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도권에서부터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핵화의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공단 재개에 관한 가시적 결과물을 내놓지 않겠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는 “과거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막판 북한과 극적으로 10·4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낸 적이 있다. 이번 정부 역시 임기 내에 공단 문제를 매듭짓고자 다급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강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개성



과거 개성공단에 ‘올인’했던 입주기업 (주)석촌도자기는 공단 폐쇄 이후 경영 악화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335명의 북한 노동자가 복직했던 개성 공장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이제는 조정주(66) 대표와 단 2명의 직원만 남아 인건 공장을 지키고 있다. 조 대표의 한숨은 언제쯤 그칠 수 있을까. /기획취재팀

공단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한 점도 고무적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직후 자신의 SNS에 남긴 축하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을 주도적으로 열어 나갈 때다.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개성공단 재개 선언이다. 선 선언·후 협의로 대북제재의 틀(비핵화 프레임)을

넘어 남북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면, 이를 계기로 끊어졌던 대화 채널도 복원될 것”이라며 사실상 포문을 열었다. 이후 경기도 주최로 지난달에도 공단 재개를 염원하는 토크 콘서트와 공단 재개 선언 범국민 연대회의 출범식을 개최하는 등 내년 대선에 대비한 소위 ‘개성공단 마케팅’을 시작한 상태다.

이에 입주기업들은 자푸라가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해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주)석촌도자기 조정주(66) 대표는 “입주기업들은 5년 넘게 희망고문을 당했다. 이제는 정말 해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2·3면 /기획취재팀

세 번이나 만났던 남북 정상... 애프터는 없었다

조짐으로만 끝난 '가동 재개의 꿈'

文대통령 취임 이후 정상회담·공동선언 '기대감'
하노이 북미대화 결렬되면서 관계 급속도로 냉각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 2월 이후 수차례 재개의 조짐은 있었다. 일어났던 남북 관계가 일시적으로 해빙기를 맞으면서 남북 정상이 한목소리로 개성공단을 다시 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개 기대감을 꽃을 피웠다. 서해 군 통산선을 비롯해 판문점 연락채널이 복원되며 남북 간 연락망이 하나둘 회복됐고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선수단 참여,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 등 문화적 교류도 활발히 이뤄졌다.

이는 곧 남북 정상 간 만남으로 이어졌다. 2007년 이후 11년 만인 2018년 4월 성사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성공단 사업 진척에 관한 내용을 담았던 10·4 선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공단 재개의 불씨는 더욱 단겨졌다. 두 정상이 회담을 마친 뒤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에는 '남과 북은 조건을 마련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2018년 하반기 남북 정상이 세 차례나 만나며 공단 재개의 기대감은 증폭됐다.

더욱이 이듬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 공단 재개는 가시권에 접어들 듯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는 다시 급속히 얼어붙었다. 급기야 지난해 6월 북한이 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면서 눈앞으로 다가왔던 공단 재개의 꿈은 결국 흩어지게 됐다.

SNS 설문조사 58.4% '정부 대처 부적절' 응답

"실제 조치 드러나지 않아" 소극적인 태도 지적

공단 재개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인일보가 지난 10~15일 SNS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38명 중 절반 이상인 58.4%(139명)가 공단 재개를 위한 정부의 대처가 적절치 못했다고 답했다. 긍정적 답변은 14.3%(34명)에 불과했다.

▶그래프 참조

공단 폐쇄 이후 북한과 재개 관련 뜻을 모으긴 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이 부정 답변의 주된 이유로 꼽혔다. 특히 우리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했다는 답변이 많았다. 한 응답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 분위기 등 북한과의 경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가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인상이 강하다"고 답했고, 또 다른 응답자는 "공단 재개의 목소리란 부르짖고 실제 이를 진전시키기 위한 액션이나 외교적 조처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희관 이사장도 "김정은 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 이후가 공단 재개 적기였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입주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우리 정부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점"이라고 꼬집었다.



개성공단 재개 관련 인식 설문조사

3월 10~15일까지 페이스북 계층에서 40~60대 오리스 비율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총 238명 응답

우리나라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적절히 대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수·진보 양극화... 피주기·달리박스 인식 공존

경기도민 44% '재개 부정적'... 국민적 합의 시급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이분법적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됐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첫 단추였던 개성공단 사업마저 '피주기', '달리박스' 등의 인식이 공존해 왔고 결과적으로 공단 재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맞물린 국민들의 대북 관련 부정적 시각도 5년간 재개 지지부진의 한 축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경인일보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공단 재개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61.7%(147명)가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도 27.3%(65명)를 차지했다. 이 중 '전혀 필요 없다'는 응답도 42명에 달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재개 필요성 관련 부정적 입장이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1%가 '필요하다', 46%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공단 재개에 앞서 부정 여론의 벽을 뛰어넘는 국민적 합의가 시급한 당면 과제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외홍보팀 김미선 과장은 "재단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개성공단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진정 논리나 정치적 성향을 뛰어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경제 교류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7기획재팀

4 개성에 가기 위한 관문이었던 사진 속 남북출입사무소는 5년째 적막만 흐르고 있다. 개성으로 가는 길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경인일보DB

기획취재팀

글 : 황성규차장, 공승배, 남국성기자
사진 : 조재현기자
편집 : 김동철, 박준영차장, 장우석기자
그래픽 : 박성현, 성숙희차장

접경지 평화경제특구·서해 평화지대... 계속 도전하는 '남북 경협'

'제2의 개성공단' 대안 찾기

인천·경기·강원지역 10곳 시장군수협의회
특화산업벨트 조성 경제 활성화 법안 촉구
통일부 방향·효과 따져 구체화 용역 준비
서해평화도로 영종-신도 구간 착공 '첫발'

담보 상태에 놓인 개성공단 외에도 인천 강화·옹진,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 북한 산업과의 또 다른 연결고리를 만들자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고 있다. 이 같은 대안이 공단 재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발의된 3개의 관련 법안은 기간 각종 제한에 묶여 있던 접경지역에 특화산업벨트를 조성해 지역 활성화 뿐 아니라 남북 간 경제 협력·교류까지 이끌어낸다는 게 핵심이다. 공단이 재개되면 향후 개성과의 연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평화특구는 남북 간 활발한 경제 교류를



지난달 2일 최중환 파주시장(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맨 오른쪽) 등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을 만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파주시 제공

통한 공동 번영의 기틀을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역시 최근 평화경제특구 구상을 구체화하는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법 제정에 대비해 특구 조성의 방향과 효과 등을 따져보겠다는 계산이다.

서해를 두고 북한과 접해 있는 인천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특별지대 조성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최근 장기적으로 영종도에서 북한 개성까지 이어질 서해평화도로의 시발점인 영종-신도 구간 건설에 착공, 향후 남북경협벨트의 핵심 인프라로 만든다는 구상을 본격화했다. 박 시장은 "서해평



화도로의 착공은 한반도가 새로운 도약과 전환의 첫발을 디딘 역사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 위치도 참조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대안들이 당초 개성공단만큼의 가치와 파급력에는 미치지 못하며,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실효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공단 재개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평화경제특구는 장기적으로 북한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고려해 추진되고 있다"며 "개성공단과 대체·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